광주경찰, '4대악 근절' 빈수레만 요란

경찰서별 홍보 예산 투입 불구 범죄는 되레 증가

성폭력에 절도 등 민생 범죄도 늘어… 시민 불안

경찰이 총력을 쏟고 있는 '4대 사회악(惡) 근절' 활동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서별로 1000만원을 웃도는 예산을 책정, '홍보전'까지 펴고 있지만 정작 일선 현장 체감도는 미미한 형편이다.

특히 경찰의 '4대 사회악(惡)' 척결 방침에도 불구, 성폭력 사건은 되레 증가하고, 강·절도, 폭력 등 5대 민생 범죄도 늘어나 '4대악' 홍보에만 매달리면서 거꾸로 시민 불안감을 키웠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홍보에 5700만원 쏟아**=30일 광주지방경찰청 산하 5개 경찰서는 캠페인 등 4대악 홍보를 위해 모두 5775만2500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광주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산경찰이 1732만4000원을 책정해 지난 20일까지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품, 전단 611만5000원 ▲성폭력간담회 및 홍보전단 110만원 ▲가정폭력 전단 60만4000원 ▲부정불량식품근절 홍보전단 15만원 등 796만9000원을 써 가장 많았다.

서부경찰은 1248만5000원의 예산을 세워 플래시몹(10만원), 학교폭력 스티커(338만원), 4대악 전단(226만원), 학교폭력 연재만화(74만5000원), 점자 명함형 전단(11만2000원), 부정부량식품 근절 전단(34만원) 등에 집행했다.

북부경찰도 1126만2000원 중 627만8500원을 썼고 남부경찰도 1175만2000원 중 홍보전단 제작 등을 위해 691만5340원을 지불했다. 동부경찰은 450만원만 책정했지만 지난 20일까지 492만9500원을 써 오히려 예산을 초과했다.

◇**구호만 요란, 범죄는 늘어**='없는 살림'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서민 체감도는 싸늘하다. 경찰은 지난 2월 25일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불량식품 단속을 비롯, 홍보에 매달렸지만 치안 예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북부경찰의 경우 4대악 근절을 내세운 2월 25일부터 지난 5월 20일까지 '4대악'으로 규정한 성폭력 사건이 82건 발생, 전년도 같은 기간(56건)에 비해 부쩍 늘었다. 620만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경찰의 '4대악 척결 의지'를 알렸지만 치안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다.

서부경찰도 이 기간 모두 50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 전년도 같은 기간(42건)에 견줘 오히려 늘어났다. 동부경찰은 13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 전년도(10건)보다 많았고 남부경찰도 지난해(4건)보다 많은 성폭력 범죄(6건)가 발생했다. 다만, 광산경찰의 경우 36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전년도(43건)에 비해 줄었다.

◇**민생 치안도 '느슨'**=경찰이 '4대악'에만 열을 올리면서 민생 치안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 지역에서는 현실화되고 있다. 당장, 5개 경찰의 4대악 척결 활동 기간(2월 25일~5월 20일) 발생한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부경찰의 경우 지난해 645건이던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절도 사건(2012년 336건→2013년 444건) 급증에 따라 올 해 746건으로 폭증했다.

북부경찰의 경우 전체 발생 건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강간·강제추행(2012년 47건→2013년 78건), 절도(2012년 801건→2013년 829건) 발생 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었다.

동부서는 강도·강간 사건은 늘어났고 절도·폭력 사건은 감소했다. 광산서는 전년도에 없었던 살인 사건(8건)이 터졌고 나머지 4대 범죄 발생률은 감소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정부, 4대악 근절 대책 발표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식품안전 등 4대악별로 국민안전체감지수가 발표되며 4대악 등 각종위험요소 근절을 위한 감축목표관리제도 도입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안전종합대책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국민안전체감지수가 4대악별로 6개월마다 발표된다.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불안감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안행부 측의 설명이다.

정종제 안행부 안전정책국장은 "정부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과 가시적인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료한방검진 받는 주민들 광주시는 30일 한방병원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광주시 북구 두암동 무등사회종합복지관에서 두암4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에게 무료한방검진을 실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안영섭 총장 비리 포착

檢,목포해양대 압수수색

검찰이 안영섭 목포해양대 총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30일 오전 목포해양대에 수사관들을 보내 총장실·기획처·사무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발전기금 입출 내역과 직원 채용 등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 총장이 발전기금을 불법적으로 쓰고 6급 이하 직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안영섭 총장은 목포해양대 전자계산소장, 해상운송시스템학부장, 교무연구과장 등을 역임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홍이식 화순군수 보석 허가

재판 지연, 인권 침해 논란도

법관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 증인과 당사자 간의 엇갈린 증언 등으로 1심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홍이식(55) 화순군수〈광주일보 4월30일자 6면〉가 결국 보석으로 풀려났다.

홍 군수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지만, 이 같은 '구속기간 임박 보석허가'가 구속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신현범)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홍 군수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홍 군수는 앞으로 법정구속되지 않는 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홍 군수는 보석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고 검찰 측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 허가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13일 기소된 홍 군수는 오는 12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돼 석방이 예상됐다.

홍 군수의 변호인은 구속기간 만료, 군수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홍 군수에 대한 '구속기간 임박 보석 허가'와 관련 일각에서는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재판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무리수' 잇단 패소

송원학원 징계부당 행정소송 항소심 등서 져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와 직원 제재와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패소했다. 시교육청의 행정행위가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시교육청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광주고법 행정 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30일 학교법인 송원학원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 제재조치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원심 재판부는 ▲2년간 법인 산하 여고 3학급 감축 ▲산하 초·중·고교를 우수기관, 연구 시범학교 지정 대상에서 배제 ▲교장·교감 자격연수 지정 대상 배제 ▲목적사업비 중단 등 시 교육청이 취한 행정 제재를 취소하도록 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2011년 8~11월 송원학원 산하 각급 학교의 비위와 관련해 교장 등 8명을 감봉이나 해임하도록 송원학원에 요구했다. 송원학원이 요구 수준에 못 미치는 징계를 의결하자 시교육청은 학급 감축 등 행·재정 제재를 했으며 송원학원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광주시교육청 전 과장 최모(58)씨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심대로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최씨는 인화학교 성폭력 관련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해 감봉 1개월로 징계가 가벼워졌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시 교육청은 당시 도가니 열풍이 일자 뒤늦게 대책반을 구성해 관련성이 떨어지는 직원에게까지 중징계를 내렸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진월운동장 송전탑 이전 區-입주민 갈등

광주시 남구와 아파트 입주민들이 송전탑 이전 장소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남구는 오는 9월 말까지 남구 진월동 진월운동장 건립 부지에 설치된 154KV 송전탑 1기를 철거한 뒤 이를 기존 장소에서 약 60m 떨어진 장소로 옮긴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새 송전탑을 설치한 뒤 이를 지난 2008년 지중화 공사(선로를 땅에 묻는 것)가 완료된 남광주변전소~J아파트~진체초교로 이어지는 송전선로와 연결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남구 진월동 J아파트 입주민들은 송전탑 이전 부지에서 100여m 떨어진 제2순환도로 인근 부지에 송전탑을 설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구는 기존 장소에서 60m, 입주민들은 150m 떨어진 곳에 송전탑을 세워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구는 주민들의 요구대로 송전탑을 이전할 경우 안전성은 물론 20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 입주민들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입주민들은 예정 부지에 송전탑이 들어서면 전자파 노출은 물론 아파트 조망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구가 공사를 강행할 땐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공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정렬기자 halo@

환각 상태서 영어 강의… 외국인 강사 적발

대마초를 흡입한 상태에서 영어를 가르쳐온 외국어 강사가 광주에서도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정희원)는 30일 "지난 28일 대마초를 밀수입해 두 차례 흡연하고 이를 더 밀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된 미국 켄터키주 출신 A(2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말부터 광주의 한 영어학원에서 전속강사로 일했으며, 강사로 일하던 지난 1월 31일 미국에 있던 지인에게 부탁해 땅콩버터 속에 대마초 3g을 숨겨 밀수입한 뒤 2차례 피웠다.

A씨는 대마초 밀수입에 성공하자 같은 방법으로 지난 10일 9.5g의 대마초 반입을 시도하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 부교육감 비난 시교육청 장학관에 경고

광주시 선관위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출마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박표진 전 광주시부교육감을 자신의 SNS를 통해 비난한 광주시교육청 정책기획담당 이재남 장학관에게 선관위의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시 교육청 이 장학관의 페이스북 글에서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서면 경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의 경고와는 별도로 당사자인 박 전 부교육감이 이 장학관을 상대로 고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시 교육청 안팎의 시각이다.

/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도난 자작극' 벌여 보험금 타내

쌍나팔

○…구입한 물품을 중고판매점에 팔아 치운 뒤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도난신고 사실확인서를 이용,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3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4)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40분께 서구 금호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 거실·안방에 있던 TV·침대를 중고판매점에 현금 41만 원을 받고 판 뒤 경찰에 허위로 도난신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 물품구입비 62만 원을 챙기는 등 최근까지 보험금 180만 원을 부당수령했다는 것.

○…김씨는 아파트 CCTV에 중고판매점 인부들이 물품을 가져가는 모습이 찍히는 바람에 덜미.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6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2타경 15658	1	목포시 용당로331번길 40, 207동 7층 704호[용해동,호반리젠시빌스위트] 84.9410㎡	아파트	160,000,000 160,000,000	임차인있음
2013타경 271	1	목포시 석현동 816-12 근화블루빌 306동 3층 307호 77.5526㎡	아파트	135,000,000 135,000,000	
2013타경 660	1	목포시 남악1로 15, 108동 10층 1003호 [옥암동,한국아델리움] 103.2335㎡	아파트	270,000,000 270,000,000	2013타경813[중복]
[대지/임야/전답]					
2012타경 11397	1	영암군 군서면 성양리 645 1673㎡	전	14,387,800 14,387,8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11939	1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242 430㎡	전	2,021,000 2,021,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12314	1	무안군 삼향읍 맥포리 332 1286㎡	전	45,010,000 45,01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412 417㎡[매각외건물소재로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대	20,433,000 20,433,000	
2012타경 14129	1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 736 1837㎡[제시외건물비매각]	전	16,716,700 16,716,7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14198	1	무안군 현경면 수양리 30 1316㎡	전	18,424,000 18,42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14990	1	신안군 압해읍 가룡리 산151-14 4959㎡[공유자고학자지분4959분의3634전부]	임야	39,974,000 39,974,000	공유자우선매수행사제한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2타경 15184	1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57-1 546㎡	전	18,018,000 18,01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469 1091㎡[매각외비닐하우스소재]	전	28,366,000 28,366,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759-13 1088㎡	전	35,904,000 35,90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15306	1	신안군 임자면 진리 324 2909㎡	전	21,817,500 21,817,5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404 2344㎡	전	17,580,000 17,58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동소 637 1091㎡[분묘소재로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전	6,109,600 6,109,6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15368	1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1080-6 4000㎡[공유자이희성지분7분의1전부]	답	5,542,870 5,542,870	농지취득자격증명요.공유자우선매수행사제한
	2	동소1078-18 1975㎡[물건번호1과지분동일]	답	2,539,260 2,539,260	물건번호1과비고동일
2013타경 66	1	목포시 달동 산143-1 174417㎡	임야	784,876,500 784,876,500	분묘소재로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2013타경 479	1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67 1517㎡	전	33,374,000 33,37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3타경 530	1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353 2102㎡	전	60,958,000 60,95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3. 6. 17.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3. 6. 24. [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ㅁ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3.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박영석